

민선 3기에 ‘여성과 더불어 발전하는 충남’을 기대한다.

민경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

I. ‘상징’과 ‘홍보’에서 ‘변화’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21세기 비전을 이야기 해 왔다. 각 분야에서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의 모습을 찾기에 분주하였고 이런 저런 계획들이 수없이 세워졌다. 이번 민선 3기는 새 천년의 첫 번 지방자치 시기로 그런 계획들이 하나 둘씩 시행되어야 하는 시기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성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새 천년이 되면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말이 난무하였다. 정보화사회의 대두와 개인중시 풍조, ‘여성적 가치’의 사회적 효용성 증가, 인권중시 풍조,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사·육아의 사회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증진을 위해 매우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등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힘들 듯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자리를 마련하고 차별 없이 일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남녀평등과 여성의 인권보장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1995년 북경여성회의 이후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여성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정부 들어 여성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급진전을 보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여성정책은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각종 선거 공약에 여성 정책 공약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정도로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커졌다. 국가 차원의 여성정책이 급류를 타면서 가부장적 차별관행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화되어 지방정부 여성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민선 1, 2기를 통해 여성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실을 설치하여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공공분야 여성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개최(2001. 9. 20)로 여성정책의 수준 및 충남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고, 「유관순 상」 제정·운영으로 종래 여성상과 차별화되는 여성상을 정립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여성 전문인으로 「충남여성포럼」을 구성(2001. 5. 8)하여 지역여성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 및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있다.

둘째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타도에 앞서 여성문제 및 지역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남여성들의 사회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커진 관심과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여성정책은 실제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양성평등을 가시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여성정책이 아직도 수혜적, 복지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실제적인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 시·군 단위로 갈수록 아직도 20세기 식의 요보호 여성 지원과 사업의 거의가 단순노력봉사인 여성단체지원, 그리고 대규모 교양교육 식의 사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진은 여성정책이 도정(道政)이나 시·군정(市·郡政)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약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여성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여건(예산, 인력 등)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성정책이 아직도 많은 부분 수요자(지역여성) 중심이 아닌 공급자(단체장, 관계공무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힘든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민선 3기에서는 지역의 여성들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내실 있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제 ‘상징’과 ‘홍보’ 중심의 정책은 ‘변화’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II. 민선 3기에 바라는 여성정책의 방향

민선 3기 충남의 여성정책은 지난 1, 2기에 마련된 H/W적인 기틀 위에 농촌의 위기, 가족해체, 노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여성발전을 이루어내고 충남발전에 여성의 참여가 가시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 충남은 명실공히 ‘여성과 더불어 발전하는 충남’이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선 3기에 다음 4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첫째,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는 분야별로 여성의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통 정책, 건설 정책, 농업 정책 등에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제 분야에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분야별로 여성정책이 입안되지 않으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과(課)별로 여성사업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참여케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인 ‘도정 전반의 여성업무 총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도정 전반에 대한 성 주류화 행정 지침 마련, 성 주류화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분석, 그리고 성 주류화 실천 결과의 인사고과 반영 등을 실시하여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는, 그 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시화 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의 핵심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활동이 가정에 한정되어 여성의 자아실현을 가로막고 있으며 경제력과 사회력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비하와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이 사회발전을 위해 활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개인의 힘 증진은 물론 사회전반의 양성평등과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여성직업 창출 및 다양한 자원활동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보육, 탁노 등 여건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직장내 여성차별 철폐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그 동안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계층 (가출 청소년, 여성노인, 매춘여성, 장애인 여성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여성복지의 지평을 확장하여야 한다. 또한 수혜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여 이들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사업, 자활프로그램 개발, 사회지도층과의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여성이 여성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와 복지를 향상하게끔 여성의 의식을 일깨우고 능력을 키우는 특단의 정책이 요구된다. 이제는 종래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교육과 단체유지 차원의 보조를 넘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여성단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원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여성정책은 여성의 대표성 증진, 정치참여 확대, 여성지도자 발굴 및 여성의 지도력 개발,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경쟁력 있는 여성과 경쟁력 있는 여성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여성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의 중요성이다. 충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는 여성정책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할 여성 NGO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정책의 파트너로서, 여성 지도력 훈련의 장(場)으로서 여성단체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선 3기에는 여성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해 본다.

Ⅲ.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의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혹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타성에 젖어버린 조직원들 때문이기도 하고 변화에 대한 지도층의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때로 부족한 재원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직정비(지위와 역할의 조정)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은 여성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성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모든 분야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위에서 언급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점검, 평가하는 일이 여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관실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란 현 여성정책관실의 위상으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는, 여성관련 업무 담당자(局別)에 대한 성평등의식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로 실시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사명감을 느낄 때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게 된다. 더구나 여성업무는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과 여성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사회의 특성상 순환보직의 인사행정에 따라 여성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때로는 매우 가부장적인 남성이 여성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 중심의 시책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여성부서는 남성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문제의 특수성, 성평등의식, 여성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여성업무 담당 공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

IV. 맺으며

서두에서 언급한 21세기가 여성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민선 3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민선 3기에는 여성이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행사성, 홍보성 사업이나 행정 편의적인 관행에서 탈피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평가하는 관행이 민선 3기에 정착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관련 정책입안자 및 업무담당자들의 사고의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